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고용상황 밀착 점검 및 청년뉴딜 집행 준비 만전

- 4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7.4만명, 고용률(15⁺) 63.0%(△0.2%p)
- 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과제 5~6월부터 채용 선발·운영 등 본격 개시
-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과제 지속 발굴
- AI·저탄소 전환에 대비,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상반기중 발표 예정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5.13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① 4월 고용동향, ② 청년뉴딜 추진방안 이행상황, ③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4월말 기준), ④ 민간 부문 일자리 상황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7.4만명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서비스업의 조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내수 연관업종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건설업·제조업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청년층·60대 이상 고용률은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어르신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문 일자리 상황 등 고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AI 도입·확산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지난 4.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1만명)」는 현재 10대 그룹 포함 70여개사에서 1.2만명 규모의 교육과정 개설 의향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참여기업 선정, 참여청년 선발 등을 거쳐 6월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대학-기업이 공동 설계·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비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4천명)」도 6월중 운영대학을 선정하고,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 일경험 프로그램(2.3만명)도 대부분 사업이 5~6월부터 선발·채용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26년 목표인원 128.8만명)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4월말까지 120.6만명을 채용하여 당초 목표(119.7만명)를 초과 달성(목표달성률 100.7%)하였다. 또한, 상반기 목표인 124.3만명(年 목표인원의 96.5%)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달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여력이 확보되는 경우 추가 채용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5월 이후에는 고유가파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하방요인도 병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청년들이 하루빨리 이번 대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청년뉴딜을 통해 역량과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민간 부문에 취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과 신산업 인력 수요 변화 등이 맞물리고, 중동전쟁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외부 영향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약속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AI의 도입과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와 현장 양 쪽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회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민생경제국	책임자	과 장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